“광주시 ‘영산강 익사이팅존’ 설계 공모절차 문제 없다”

광주지법 “중대하자 없다” 판결
시민휴식·체험공간 조성 본격화
5년간 가처분 8건 기각 공정성↑

광주시가 민선 8기 핵심사업 중 하나로 추진중인 ‘영산강 익사이팅존’ 설계 당선작 선정 논란에 대해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시는 26일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 사업 관련,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이 광주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은 지난 2월 20일 진행된 설계 공모 심사 결과에 불복한 2등 입상 업체가 입찰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한 것으로, 법원은 입찰 과정의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설계 공모에 따른 당선작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시는 이번 설계공모가 디자인의 우수성, 창의성, 계획의 적절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영산강 익사이팅존’은 북구 동림동 산동교 일원에 광주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익사이팅 꿀잼 라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익사이팅존에는 4,000㎡ 규모의 ‘아시아 물 역사 테마 체험관’과 자연형 물놀이 체험시설 등이 들어선다.

물놀이 체험시설은 실내 인공서핑장 1000㎡, 자연형 물놀이장 1만㎡, 잔디마당 1만1,800㎡ 규모로 4계절 내내 특별한 재미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복합 체험 공간으로 조성한다.

양보근 시 신활력총괄관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설계공모 당선작 업체와 설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산강 익사이팅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영산강 익사이팅존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최근 5년간 광주시가 발주한 공사 및 용역 계약에 대한 가처분 신청 8건은 모두 기각됐다.

가처분은 주로 적격심사에서 배제되거나 낙찰 순위에서 밀린 업체들이 제기한 것으로, 이들은 입찰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시가 체결하는 공사·용역 계약은 공모나 입찰을 통해 이뤄지는 사법상 계약으로, 불복 절차는 주로 민사상 가처분 형태로 제기된다. 이 경우 법원은 사실상 본안 소송 수준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가처분 결정에 따라 본안 소송 자체가 생략되는 경우도 많다.

이 같은 법원의 일관된 기각 결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체결 절차가 지켜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길용현 기자

김영록 지사, 노인파크골프대회 참석 ‘격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6일 목포 국제파크골프장에서 열린 ‘제3회 전남도지사기 노인파크골프대회’에서 내빈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교통 등 광주 도시문제, AI로 푼다

내달까지 기술개발 업체 모집

광주지역의 교통, 환경, 안전, 사회복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문제 해결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본격 도입된다.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26일 “‘2025년 도시문제 해결형 AI 솔루션 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달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민 삶과 밀접한 지역 현안을 AI 기술로 해결하고, 현장 실증과 사업화까지 연계하는 것이 목표다. 총 4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1억원 내외로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AI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으로, 자치구나 수요기관 등과의 컨소시엄 형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광주 외 지역의 기업은 사업 협약 전까지 본사를 광주로 이전하거나 지사·지점을 설치해야 한다.

사업기간은 올해 12월까지이며, 선정된 기업은 광주 내 실증공간을 확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솔루션을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사업 주요 과제로는 △교통량 예측 AI 시스템 △노후시설 위험 탐지 시스템 △고독사 방지를 위한 라이프로그 관제 서비스 △AI 기반 관광객 행동 데이터 분석 시스템 △AI 기반 맞춤형 일자리 매칭 플랫폼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홈페이지 또는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길용현 기자

‘다이아몬드 제도’ 핵심 신안 장산~자라간 연도교 착공

지방도 805호선 마지막 구간
의료 접근성 등 삶의 질 향상
김 지사 “관광활성화 등 지원”

전남 서남해 해양관광 브랜드인 ‘다이아몬드 제도’ 구상의 핵심축인 신안 장산~자라간 연도교가 26일 첫 삽을 떴다.

전남도는 26일 “신안 장산면 북강선착장에서 장산~자라 연도교 개설 공사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해상교량 건설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착공식에는 김영록 지사,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 김문수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 최미숙 도의원, 이상주 신안군의회 의장, 장산도·자라도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장산~자라 연도교 개설공사는 전남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제805호선의 마지막 미연결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신안군의 해양관광 브랜드인 ‘다이아몬드 제도’ 구상의 핵심축이다. 총연장 3.04㎞(해상교량 1.63㎞) 구간이 왕복 2차로로 신설되며, 총사업비 2,122억원이 투입된다.

장산~자라 연도교가 개통되면 섬 지역 응급환자 발생 시 목포지역 응급의료센터까지의 이동 시간이 기존 배편 2시간 이상에서 차량 기준 1시간 내외로 단축된다. 이를 통해 섬 주민이 겪어온 응급의료 접근성과 복지 수준 등 삶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섬 지역 거주로 인한 단절감 해소와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록 지사는 “오랜 세월 불편한 생활 여건에서도 묵묵히 견딘 장산도 주민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연도교 착공을 계기로 장산을 비롯한 신안군의 교통복지 향상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써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이아몬드 제도’는 신안 14개 읍·면 중 자은·암태·팔금·안좌·장산·신의·하의·도초·비금면 등 9개 면이 밀집된 지역으로, 지형이 다이아몬드 형태를 이루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이 지역을 연결하는 연륙·연도교는 총 16개가 계획돼 있다. 현재까지 8개 교량이 개통됐다. 나머지 국도 2호선 구간 내 7개 교량 중 1개는 국토교통부가 설계를 진행 중이며, 6곳은 계획 단계에 있다.

정근산 기자

전남 녹차 발효 ‘K-다크티’ 캐나다 첫 수출길

북미 시장 공략 본격화

전남도농업기술원은 26일 “전남산 녹차를 활용해 개발한 발효차 K-다크티(Dark Tea)를 월드티 농업회사법인을 통해 캐나다에 첫 수출했다”고 밝혔다.

다크티는 세계 6대 차류 중 하나다. 미생물과 효소 작용을 통해 발효시킨 차를 말한다. 중국 보이차(푸얼차)가 대표적이다.

이번에 수출된 K-다크티는 전통 발효식품인 메주와 장류에서 발견되는 황금색 미생물인 금화균(Eurotium sp.)을 이용해 전남산 녹차를 발효시켜 개발한 새 제품이다.

이 제품은 기존 녹차의 쓴맛과 떫은맛을 줄이고 은은한 단맛과 부드러운 풍미를 지닌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전통 발효기술을 접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고 건강기능성 소재로의 가능성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K-다크티는 티젠농업회사법인, 전남도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 월드티가 공동 수행한 국내산 녹차를 활용한 발효기술 개발 및 혈중지질 개선 기능성 소재 개발 연구 과제를 통해 탄생했다.

이번 수출은 월드티가 확보한 다크티 대량 생산 기술을 기반으로 북미 프리미엄 차 시장 진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캐나다 현지 유통망을 통해 시범 판매를 시작하고 소비자 반응과 시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김행란 원장은 “이번 수출은 국내 녹차를 고부가가치 발효제품으로 전환한 첫 성공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응용제품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통해 차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광주시, 여름철 풍수해 대응 합동훈련

단계별 재난대응체계 점검

광주시는 26일 남구 양과동 빛고을농촌 테마공원에서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 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 주재로 진행한 합동훈련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소방·경찰, 한국전력공사, 자율방재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시민 60여 명이 참여했다.

산사태 대응 훈련을 통해 극한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 상황을 가정하고 예보 발령부터 대피, 응급 복구 등 단계별 재난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상황판단 회의 개최, 산사태 주의보·경보 발령, 현장 상황전파, 주민 대피 유도·대피소 이송, 응급 복구 인력·장비 투입 등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부터 회복 단계까지 절차를 점검했다.

재난 취약계층의 사전 대피 절차와 유관기관의 현장 출동 체계, 경찰·소방 등의 실시간 대응과 응급 복구 절차 실습 등 위기 상황 대응 능력도 살폈다.

길용현 기자